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8. 4.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	담당자	·과장 이재평, 서기관 김종성, 사무관 김태웅, 신용화 ·☎ (044) 201-3384, 3387, 3385
	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	담당자	·팀장 박진호, 사무관 이태운 ☎ (044) 215-2851
	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	담당자	·과장 진조평, 팀장 김용배, 주무관 김훈, 박성운 ·☎ (02) 2133-7136, 7137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층수 완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머니투데이 등, '20.8.4) >

◆ 서울시 “모든 공공재건축 50층 아니다...” 정부 발표 반박 등

- 정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이번 대책의 정책 취지에 맞추어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것이며, 이러한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「주택공급 확대 T/F」를 구성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.
 - “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”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표하였으며,
 -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.

- 층수 제한과 관련하여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, 준주거 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- 그러나,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도 300~500% 수준으로 대폭 완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
- 이 경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의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- 다만,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,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김종성 서기관, 김태웅 사무관(☎ 044-201-3384, 33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